



리뷰 리포트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1. 개요 및 배경

2. 주요 내용

- 2.1. 저작권 보호 기능이 강화된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
- 2.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2.3.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

3. 맺음말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요약문

유럽의회는 디지털 환경의 참여자 간에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을 의결했다.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지속적인 보상을 담보하는 공평한 보상(equitable remuneration)에 대한 논의의 결과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21년 6월 7일까지 새로운 저작권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전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해당 지침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개요 및 배경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¹⁾(이하 지침)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유럽연합 내에서 통일성 있게 관리·조정하는 것이다. 지침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약진과 함께 거대 온라인 사업자들의 수익과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대가는 적은 현실을 바로잡고자 제정되었다.

1) DIRECTIVE(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표 1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구성

장	주제	조항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대상 및 적용범위 제2조 정의
제2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제3조 학술 연구 목적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제4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예외 및 제한 제5조 디지털 및 국경을 초월하는 수업에서 저작물 및 기타 보호대상의 이용 제6조 문화유산의 보존 제7조 공통 규정
제3장	콘텐츠 라이선스 업무의 개선과 콘텐츠에 대한 접근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제1절 절판 저작물과 기타 보호 대상) 제8조 문화 유산 기관에 의한 절판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이용 제9조 국경을 초월한 이용(EU 회원국간 이용) 제10조 공개 조치 제11조 이해관계자의 협의 (제2절 집중 이용 허락을 수월하게 하는 조치) 제12조 확장 효과가 있는 집중 이용 허락 (제3절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 있는 시청각 저작물의 접근 및 이용) 제13조 협상 시스템 (제4절 시각 예술의 공유 저작물(공공 도메인에서 시각 예술 저작물)) 제14조 시각 예술의 공유 저작물(공공 도메인에서 시각 예술 저작물)
제4장	저작권 보호 기능이 강화된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	(제1절 언론출판물에 대한 권리) 제15조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의 보호 제16조 공정한 보상 청구권 (제2절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보호 콘텐츠의 특정한 이용) 제17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보호 콘텐츠의 이용 (제3절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보상) 제18조 적정하고 비례적인 보상원칙 제19조 투명성 의무 제20조 계약 조정 시스템 제21조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제22조 취소권 제23조 공통 규정
제5장	종결 규정	제24조 지침 96/9/EC, 2001/29/EC의 개정 제25조 다른 지침에 규정된 예외와 제한의 관계 제26조 시간적 적용 제27조 경과 규정 제28조 개인정보보호 제29조 국내법 이행 제30조 심사 제31조 효력 발생 제32조 지침의 수범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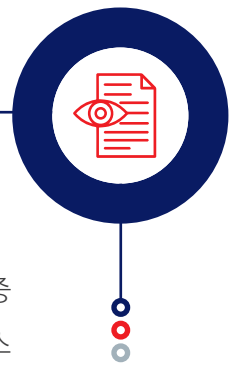
유럽위원회가 2016년 9월 해당 지침안(案)을 처음 제안한 이후, EU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의 협상 대표들이 모여 총 다섯 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마침내 2019년 2월 13일 유럽의회·유럽위원회·유럽연합(EU)이사회 간에 DSM 저작권지침(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글(Google) 뉴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중이용제공권을 언론출판사에 부여하고 유튜브(YouTube)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도록 ‘업로드 필터’를 도입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월 15일 EU이사회가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5월 17일에는 관보를 통해 공포되어 6월 7일부터 발효됐다. 지침의 체계는 제정 이유와 본문으로 되어 있고, 86가지 제정 이유, 5개 장, 7개 절,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구성은 앞의 표와 같다.

2. 주요 내용

2.1. 저작권 보호 기능이 강화된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

지침의 제15조 제1항은 언론출판물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출판물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추세가 커짐에 따라, 언론출판사 혹은 발행자(퍼블리셔)의 권리 보호 문제가 떠올랐다. 예컨대 구글의 검색 결과에 뉴스 페이지가 연동되는 것과 같이 온라인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 권리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첫째, 간행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 간행물 발행자의 저작물 등을 공중에 전달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자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그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출판사의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righ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은 언론 간행물의 출판사 혹은 발행자(퍼블리셔)에게 부여된다. 복제권은²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란 단순히 복사한다는 의미를 넘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29/EC 제2조에 규정된 공중이용제공권은 저작물 및 음반 등에 고정된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³

둘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이하 OCSSP)에게 저작권 보호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OCSSP가 이러한 저작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등을 허락 없이 공중 전달한 데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OCSSP가 서비스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사하는 일명 ‘업로드 필터’를 적용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이다.

업로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OCCSSP의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 한 저작물에 대해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전달행위(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또는 공중이용제공행위(ac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로 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제공자가 저작물이나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공중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회저작권지침 제3조 제1항과 제2항(공중전달권 및 공중이용제공권)에 언급된 권리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한 조치에는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

2) EU 저작권 지침 2001/29/EC 제2조 참조

3) 단,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상업으로 이용하는 개인 이용자, 하이퍼링크, 언론출판물의 개개의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발췌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침은 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호 저작물과 보호 대상을 공중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⁴, 플랫폼 제공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권리자와 서로 협력해야 하며,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의 삭제나 이에 대한 접근 차단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의제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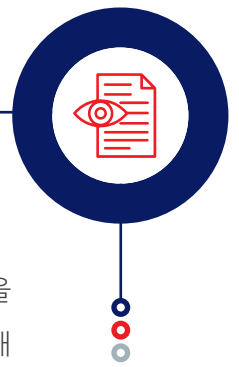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이용 계약에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저작자 및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이용 방법과 이용으로 인한 수익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당초 합의한 보상의 규모가 이후에 전체 수입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자 및 실연자는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이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 허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지침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지침은 ‘학술·연구’의 목적이 있는 경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즉, 학술과 연구 목적인 경우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더라도 복제와 발제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정보기술 산업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이 허용되며, 수업에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을 허용한다. 단, 이때 저작물 이용은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공공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문서보관소), 영화 및 오디오 유산 기관 등 일명 ‘문화유산기관’들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는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을 형태나 매체와 관계없이 이들을 보존할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할 수 있다.

4) 단, (a)플랫폼 제공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b)권리자가 플랫폼 제공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계가 있는 특정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이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c)권리자가 침해를 통보한 저작물 및 보호 대상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장래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b)항에 따라 노력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위 예외 조항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데이터 정규화(normalize)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관계의 명확성을 위함이다.⁶

2.3.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절판 저작물과 기타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문화유산기관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신들이 보관 중인 절판 저작물이나 기타 보호 대상을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 관리단체 또한, 권리자의 의리에 따라 절판 저작물의 이용을 문화유산기관에 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 이용 시에 저작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회원국은 저작물이 절판 저작물로 되는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절판 저작물의 시점을 정하기 이전에 권리자, 저작권관리단체, 문화기관들과 협의해야 한다. 절판 저작물의 공개를 기록하기 위해서 온라인 포털을 설치해야 하며 이 포털은 EU 지식재산권청이 관리한다. 포털에는 문화유산기관·집중관리단체 또는 관련 공공당국에 관한 정보, 권리자의 이용 가능한 옵션에 관한 정보, 라이선스 당사자·적용지역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저작물 등의 유형 때문에 어렵고 비현실적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관리단체는 관리를 위한 합의가 없더라도 특정한 영역의 이용에 한정하여 저작물의 집중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회원국에서 라이선스 대상의 저작물 등과 권리에 관련하여 권리자들을 충분히 대표해야 한다.

5) 머신러닝에서 알고리즘의 데이터 이해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동일한 정도의 스케일(중요도)로 만드는 과정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가진 특성(feature)들을 비교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데, 데이터가 가진 특성의 스케일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정확한 데이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정규화가 필요하다.

6) 출처: 임한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2.09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 제공자와 관리자가 비디오 콘텐츠의 이용 허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중재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청각 저작물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에 제공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또한, 회원국이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중립적인 기관과 조정자는 협상을 통해 계약 당사자를 지원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조건을 제안하는 등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각 예술의 공유 저작물과 관련한 제14조는 시각 저작물의 복제물이 독자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맺음말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침은 유럽 시장이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저작권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디지털 저작물 활용의 효율성과 저작권 보호를 동시에 이루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디지털 시장의 요구 사항에 발맞춰 콘텐츠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창출하는 수익이 저작권자에게도 적절하게 분배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법제적 정비 사례로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1. DIRECTIVE(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2. Luxembourg: Adoption Of New European Copyright Directive – January 2020, Mondaq, 2020.3.16
3. 박성호,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 주요 쟁점', KISO저널 제35호, 2019.6.18
4. 임한규,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12.9